

【특집: 근현대 국가 권력의 차별과 공동체 관리】

미 군정기 반미연동 통제에 나타난 대민 관리 특성

송정현* (전주대학교)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선전을 통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였다. 일련의 공보 활동은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해방공간에서 생겨난 제 분야의 결핍 상황은 민중의 불만을 야기했고 각종 유언비어로 표출됐다. 미군은 대한정책과 점령통치 홍보를 위해서 '불온 연동' 즉, 반미연동을 통제하였다. 유언비어는 사회문제를 진원지로 발현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중의 의식 또한 담아냈다. '빠라'와 '포스터'는 유언비어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미군정기 유언비어 단속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데 바로 한국인에게 통제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남한 정책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는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권력이 남한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미연동 사례에 집중하였다. 당시 유언비어는 자주 권력층에 이용되었고 때론 편협의 성격까지 드러났다. 유언비어는 언론으로서의 불완전한 성격을 갖지만, 민중의 심정 또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당시 대표적인 민생 문제로 꼽을 수 있는 식량과 전염병 등이 소재로 빈번히 등장하였다. 미군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말하는 입, 생각,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대민관리의 일환으로서 통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 **주제어:** 미 군정기, 반미연동, 유언비어, 빠라, 대민 관리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songjh0171@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I. 머리말

후자의 말처럼 도둑처럼 왔다던 해방은 갑작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비롯해 해방의 기쁨을 대변할 언론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다. 광복 소식을 실어 나르는 벽보와 ‘빠라(傳單, Leaflet)’, 각종 ‘유언비어’로 시끌벅적한 풍경이 연출될 뿐이었다.¹ 이러한 상황은 미군 진주 이후로 점차 통제 국면을 맞이하였고 미 군정기 ‘반미언동’의 한 사례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비어는 아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정의되며, 공식적인 언론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해방공간에서는 그 소재가 사회문제와 결부된 민생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가 만들어 낸 결핍이 민중의 강력한 요구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미군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말하는 입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대민 관리의 일환으로서 통치 전략을 수립하였다. 통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때 민중의식을 대변하면서 통치 주체에 의한 대민 관리의 한 방법으로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대적 특수성은 존재하겠지만, 지배자와 피지배자 어느 쪽

1 전단을 뜻하는 빠라는 ‘Bill’에서 유래한 일본식 표현으로 흔히 ‘전단지’, ‘리플렛’으로도 불린다. 본고에서는 같은 의미로서 원문의 표기에 따라 ‘전단’과 ‘빠라’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든 가리지 않고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갖는다. 통치를 주도하는 권력의 통치 전략인 동시에 대중의 대항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민중 내부 결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집단적 의식을 고무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해방 직후 제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민중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었다. 자연스레 민중의 지지와 결부돼 권력으로 유입되거나, 유용한 소재로써 정치기획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었다. 예컨대, 식량을 비롯한 주택, 생필품, 위생 분야의 결핍은 곧 민생 안정의 위협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였다. 민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통치 행위에 대한 반응도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미군정은 이러한 민생 관련 주제를 여론으로 대상화해 남한 정책 목표를 전달하고 점령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선전을 들 수 있다.² 미군은 진주를 앞두고 점령군의 상륙을 알리는 전단을 제작해 상공에서 살포하였다(森田芳夫·長田か子編 1979, 278). 미군의 공식적인 첫 선전이라 할 수 있다. 전단 살포는 미군의 남한 상륙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일종의 공보(公報) 행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후로는 여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공보 정책을 수립하였다.³

2 미군정기 공보활동과 선전을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이 있다. 박수현, 2021.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활동과 선전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해당 논문에서 ‘공보(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Public Relation, Civil Information)’와 ‘선전(Propaganda)’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미군정 공보담당자도 공보에는 선전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공보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면, 선전은 개인을 비롯한 단체, 정부의 의도를 대중이 수용하고 반대 의견은 거부하도록 언어 및 시각자료 등을 활용한 조직적인 시도로 정리하였다.

3 미군정은 1945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총 10여 개의 방송국을 접수했다. 운영과 관리는 한국공보담당부서(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와 미군정의 방송 및 통신부서(Communication Bureau)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였다. 공보담당 부서는 이후 부서명을 ‘정보 및 공보부서’로 개칭해 운영하였다. 이후에는 여론담당부서(Office of Public Opinion)와 공보실(Office of Public Information)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공보실은 기획, 출판, 라디오, 영상, 생산, 공공연설 및 전단지 분배 등 총 6개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여론담당부서에는 민간인 접촉 부서를 비롯해 연구담당과 정치동향을 살피는 전담부서가 존재했다.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I, Korean Politics and People-the First Six Months: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ection, Chapter I,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미군사』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선전 정책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김민환 1991; 차재영 1994; 박수현 2010). 앞선 연구들은 미국의 대한공보정책과 활동에 있어서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공보 정책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연구의 필요성도 남겼다. 이 밖에도 남한 사회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여론과 방송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있다.⁴ 선전 전략의 하나인 ‘빼라’에 주목한 연구 성과도 있다(정선태 2011). 이상의 연구는 미군정의 언론 정책이 분명한 선전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음을 밝혔다. 기왕의 논문들이 미군정 정책을 중심으로 살핀 것에 비해 민중 의식을 읽으려는 시도는 미비하였다.

미군은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어떤 매체보다도 입을 통한 전파가 일반적임을 알고 있었다. 방송 매체 혹은 여론으로 형성된 메시지가 구전을 통해 널리 유포된다고 보았다. 진주 이후로는 줄곧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온 언동’ 즉, 반미언동에 대해서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유언비어는 당시 사회 상황과 민중 의식을 살피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대부분의 유언비어는 사회문제를 진원지로 발현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수를 포함하거나, 선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전단과 포스터는 유언비어의 확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언비어가 지속될 경우, 민심의 동요로 이어져 중국에는 통치 주체를 부정하는 결과까지도 이르게 된다.

그만큼 유언비어는 통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미 군정기 유언비어 단속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데 바로 한국인에게 통제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남한 정책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 활동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입에 대한 통치’는 순조롭지 않았다. 미군정의 선전에 버금갈 정도로 이미 남한에는 반미언동에 관한 유언비어가 양산되고

4 박용규, 2005, “미군정기 방송의 구조와 역할,” 〈한국언론학회〉, 김복수, 1991, “美軍政의 言論政策과 韓國言論의 形成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 사회 동향(1945-1947),” 〈韓國史論〉 60, 위 연구들이 미군정이 여론을 통해 민중의 동향을 살핀 것이라면, 여론을 주관했던 조직과 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 성과도 있다. 김보미, 2014, “미군정기 정치의 의사소통 구조와 여론조사,” 〈사회와 역사〉 103.

있었다. 주지하건대, 당시 사회에서 발생한 유언비어를 공식적인 여론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군정과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음해하거나, 꺾기 위한 수단으로 빈번히 이용됐다. 예컨대, 해방 이후 만연했던 전염병의 원인을 군정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연결 짓기도 했다. 당시 식량과 전염병 문제는 유언비어의 단골 소재였다.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권력이 남한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쳐 여러 잡음이 나타났고 반미운동은 다양한 유언비어로 표출됐다. 물론 자주 권력층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지만, 민중의 심정 또한 반영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유언비어 사례들을 중심으로 반미운동 양상을 살펴보고, 유언비어 단속을 대민 관리의 일환으로 보고 통치 전략에 적용되는 과정과 그 특성에 대해 밝히겠다. 유언비어 사례를 살피는 일은 당시 민중 의식과 일상에 관한 통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군정의 대민 관리 성격을 고찰하는데도 유효하다.

II. 해방공간에서 나타난 반미운동 양상

해방공간은 새롭게 등장한 통치자인 미군과 피해자인 한국인 그리고 패배자인 일본인이 만들어낸 이해관계가 맞물린 그야말로 혼란의 장이었다. 한국인의 뜻대로 당장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군은 한국인에게 일제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질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진주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지난 36년간의 기억은 쉽사리 떨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 증명됐다.⁵

점령통치에 있어서 피통치자의 협조는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대민 관리는 바로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 사안이었다. 점령통치는 대민 관리의 하나로 이해

5 해방 직후 일본인과 식민통치기구를 향한 조선인의 공격 사례는 다음을 참조.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第一巻 日本統治の終焉』, 東京: 巖南堂書店, 13-4쪽.

할 수 있는데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일시에 해결해줌으로써 통치자의 권력을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안정성 또한 담보할 수 있다. 효율적 대민 관리는 ‘통제’, ‘방임’, ‘억압’, ‘회유’, ‘포섭’, ‘배제’ 등 다양한 기제의 동원을 통해서 가능한데, 통치자는 사회 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민에 대한 통제를 수시로 발동시킬 수 있다.

미군정이 한국인의 말부터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한 사실은 반미언동의 한 사례로서 접근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언비어 단속이다. 반미언동은 각종 유언비어 유포를 포함해 공공포스터 훼손 등으로 나타난다. 유언비어가 생성되는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빠라가 등장한다. 빠라가 먼저 돌고 뒤이어 유언비어가 양산되거나, 유언비어가 전파된 다음에 빠라가 생성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빠라는 유언비어 확산에 화력을 더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유언비어는 대중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선동 대상이 명확하다. 그런 이유에서 대중 선동에 적합한 소재들이 유언비어로 만들어진다. 여기서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어떤 형태의 통치라도 통치자가 피통치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방은 오랜 식민지와 전쟁 끝에 맞이한 만큼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였다. 당시 유언비어의 주된 소재가 민생 관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언비어는 민중의 요구를 담고 있었다.

당시 유언비어 속 미군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면서 권위적이기까지 한 대상으로 그려졌다. 미군은 선전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과거와 같은 식민 통치가 아님을 피력하는 동시에 독립 국가 건설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인식시키려고 하였다. 미군은 남한 전역에 존재하는 방송국들을 선전매체로 운영해 남한에 친미와 반공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미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국의 우호적인 정당을 지원해 나가면서 대한정책을 완수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미군의 통제 아래 해당 방송국들은 충실한 선전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하지만 ‘말하는 입에 대한 통치’는 쉽지 않았다.

미군은 정보 전달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입을 통한 전파가 일반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공식적인 방송 매체에서 생산한 메시지라 할지라도 결국 전파는 입에서 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구전 과정에서 유언비어는 자연스레 등장하였고 여러 사회문제를 등장시켰다. 그중에서도 식량 관련 유언비어는 종전 이후에 결핍된 사회에서 가장 호소력 있는 주제로 통했다. 미군정의 자유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식량정책 실패는 건잡을 수 없는 반미운동으로 이어졌다.

통치 정책상 민심의 동향은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한다. 미군정은 민간 여론에 대한 조사를 정기와 비정기로 진행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군정 첫해는 남한 주민에게 우호적인 인상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였다. 민심의 향방은 장차 새로운 국가 질서 수립 과정에서 협조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남한 주민이 원하는 정부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 조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해당 여론 조사의 결과다.

〈가. 자본주의, 나. 사회주의, 다. 공산주의〉

나(사회주의) 6,037명, 가(자본주의) 1,189명, 다(공산주의) 574명, 모르겠다 653명

(東亞日報 1946/08/13)

위 사례는 미군정청 여론조사국에서 실시한 남한 주민이 원하는 정부 형태는 무엇인지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총 8,5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답변은 전체인원의 70%를 차지한 사회주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전체인원의 14%를 차지했고 공산주의가 전체인원의 7%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반공을 기치로 한 자유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군정 실시 이래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 정부 형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군정으로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미군은 통치 방침에서도 줄곧 자유주의를 표방해 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초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민심의 행방과 관련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의 진주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동안 생겨난 권력과 그로 인한 다툼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정 초기에 아무 대책 없이 실시한 공출제 폐지와 쌀 자유시장 개설 허가로 인해 발생한 식량난이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식량난 문제의 책임 소재는 권력 다툼에도 이용되어 상대측을 공격하는 데 이용됐다.

한국인에게 미군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변화에 따른 명분과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각 지방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미군정을 향한 비방적인 유언비어가 보고되는 실정이었다. 다음은 미군정을 대상으로 한 유언비어를 정리한 내용이다.

〈가〉 1. 소작료가 삼분의 일로 줄어든 것은 모두 인공의 덕택이다. 앞으로도 더 줄여갈 예정이며, 수세와 비료대도 모두 지주가 부담하도록 하겠다. 2. 인공에서는 일인 소유의 전답에 관한 소작료는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미군정청에서는 자꾸 바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3. 아놀드 장관이 파면된 것은 인공을 반대한 까닭에 미 국무성이 분개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파면해 방송으로 송출한 것이다. 이를 먼저 인지한 것은 하지가 아닌 인공이다. 4. 세계 각국에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조선만 그러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방해 때문이다. 5. 탁치를 찬성해도 소련은 약소국의 해방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6. 김구와 이승만은 늙고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썩은 고목나무 같다. 대통령은 여운형이 되어야 한다(東亞日報 1946/01/14).

〈나〉 다음은 공보부장 이철원(李哲源)이 각 지방의 쌀 수집 상황과 치안 상태 등을 돌아보고 와서 밝힌 기자단과의 회견 내용이다…(중략). 미군이 쌀 속에 원자탄의 원료가 섞여 있어서 쌀 수집에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쌀이 밀가루보다 지양분이 많아서 미국민이 쌀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먹고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京報新聞 1946/11/22).

위 사례를 통해서 유언비어의 내용이 ‘정치와 인사’, ‘독립 국가 수립에 있어 미군의 방해’, ‘반미 친소적’, ‘사리사욕’, ‘수탈’, ‘식량 수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는 미군정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인민공화국(이하 ‘인공’)

이 유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인공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과 농민 선동을 목적으로 소작료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의 인공 불인과 관련한 정치적 공격도 눈에 띈다.

〈가〉 3의 사례처럼 미군정청 주요 인사와 관련한 유언비어도 존재했다. 일례로 하지(John R. Hodge) 중장이나 러취(Archer L. Lerch) 장관이 워싱턴 혹은 기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김없이 해당 사안을 소재로 한 유언비어가 생성됐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유언비어 양산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東亞日報 1947/06/20). 〈나〉를 살펴보면, 미군정의 식량정책이 실패한 이후에 실시했던 공출제가 사실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유언비어는 미군정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식량 공출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엄중히 단속하였다. 식량 수집 정책을 방해하는 자를 ‘모리배’로 지칭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였다(自由新聞 1946/07/01).

1946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후로 식량난과 관련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적 수법이 가열되기도 하였다. 당시 언론도 미군정의 식량정책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정 통제 하에 있었던 일간지였던 조선일보조차도 미곡 수집 정책에 관해서는 “군정의 미곡 수집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었고 미군정 정책을 조소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군정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앞으로 미군정이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 독립신보에서는 “한국인들이 실망하자 미군정은 인도산 옥수수과 밀가루를 나누어 줬다. 하지만 이것을 먹은 노약자들이 영양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다.”라고 했다.⁶ 미군정은 미곡 수집을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장의 삐라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하지만 반대 세력에 의한 유언비어도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다.

6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V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V, CHAPTER VI AGRICULTURE, II. PRODUCTION, A. Food Crops』

해당 유언비어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인들이 쌀을 통조림에 숨겨서 은밀히 수출하고 있다. 미군정이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한 이유는 바로 해당 시간대에 비행기와 선박을 이용해 통조림을 운송하려는 목적에 있다. 둘째, 미국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셋째, 미군이 미곡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 농민을 살해했다. 넷째, 어떤 이의 목격에 의하면, 휘발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트럭에서 드럼통이 떨어졌는데 그 속에 있던 것이 연료가 아닌 도정된 미곡이었다.” 미군정은 해당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고자 이미 지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947년 1월 24일에 기자 22명을 대상으로 화물선 보올라인 리퍼(Bowline Reefer)의 하역과정에 대한 참관 투어를 마련하였다. 참관 종료 후에는 관련 영상을 영화로 제작해 배포하였다.⁷

유언비어는 전염병을 소재로도 등장하였다. 당시 전염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기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곧 대규모 인구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문제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 인프라가 밀려드는 전재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위생 시설의 부재는 전염병 문제를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공기오염이나 역겨운 냄새 그리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발생한 악취 등에 혐오와 두려움의 역사가 깊다(주나미 역, 알랭코르뱅 저, 2020, 38). 위생은 민생 관련 사안 중에서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데 그만큼 미군정 통치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전염병 관련 유언비어를 살펴볼 수 있다.

전라북도에 반미 관련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고 전주 전투 정보 지휘소가 보고했다. 해당 유언비어는 미국 물건의 품질에 타격을 입혔다. 소문의 내용은 미국 제품에 콜레라균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경고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성공적으로 식민화하기 위하여 치사량이 높은 유행성 콜레라를 퍼뜨리려고 한다고 하였다.⁸

7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V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V, CHAPTERVI AGRICULTURE, II. PRODUCTION, A. Food Crops, Civil Affairs Handbook, Korea, Sec. 7, “Agriculture”, M370-7』

위 사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반미 관련 내용이다. 유행성 콜레라의 발생 원인은 전재민의 유입과 인구의 이동에 기인하지만, 자연재해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였다. 특히 관련 유언비어가 발생한 시점인 1946년도 6월은 남한이 대홍수를 겪은 시기와 일치한다. 1946년도 6월 26일 오전에 측정된 강수량을 살펴보면, 서울 174mm, 인천 282mm, 부산 66mm 등 많은 비가 내린 것을 알 수 있다(서울신문 1946/06/28). 이 정도의 강수량이면 그 당시 열악한 사회 제반 시설을 고려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미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 유행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전라북도 지역이 심각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미는 호열자(虎列刺, 콜레라) 유행에도 큰 영향을 주어 최근 2, 3일 내로 환자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지금 가장 심한 곳은 동진강 유역인 전북의 김제, 부안, 정읍의 각 지방과 경북의 대구, 영천 지방인데...(중략). 26일 현재 남조선 전부의 환자 발생 수는 지난 22일 이후 300명이 더 늘어 1,611명이며, 그중 사망자는 48%인 776명인데 이 새 환자는 거의 전부가 전북과 경북 지방의 사람들이다(自由新聞 1946/06/27).

장마로 인한 콜레라 환자가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환자 또한 해당 지역의 환자가 대부분이다. 미군정 보고서에서도 해당 시기의 콜레라 발생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도별 콜레라 발생 현황(1946년 6월 기준)

지역	발생 건수(건)	사망자 수(명)
경기도	26	11
강원도	67	36
충청북도	2	0
충청남도	8	4
경상북도	140	64
경상남도	452	230

8 『G-2 Periodic Report, HQ 6th Infantry Division, Chonju, Korea』, p.874.

전라북도	484	190
전라남도	156	57
합계	1,335	592

*출처: 『G-2 Periodic Report, HQ 6th Infantry Division, Chonju, Korea』, pp.498-499.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원인은 특수한 공간이 만들어낸 결핍의 결과였다. 무엇보다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 이유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아무리 유연비어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욕구에서 연유된다지만, 당시로서는 정치적 집단의 이익과 목표에 의한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이를테면 미군정과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꺾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동원되었다.

식량과 전염병 같은 소재는 당시로서는 민생 사안 중에서도 호소력 있는 주제로 통했다. 그런 이유에서 해당 문제들은 유연비어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기본적으로 민생 문제는 통치 정책에서도 통치자가 통치 대상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민의 생사와도 결탁해 나타나므로 인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집단적 의식을 고무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 미군정으로서의 당시의 유연비어를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민생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III. 반미운동 단속을 통한 대민 관리 특성

해방은 곧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간 자리에 새로운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기대의 의미였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으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앞날에 대한 예고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벽보와 전단 등을 타고 미군의 진주 소식이 전해졌다. ‘한반도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빠라에는 경거망동에 대한 경고와 추후 미군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森田芳夫·長田かゝ子編 1979, 278). 제24군단 정보참모부는 최대한 많은 수의 남한 주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일본

어로 작성하였다. 진주를 며칠 앞두고 9월 1일과 5일에만 13만 장씩 총 26만 장의 뼈라가 서울, 인천, 부산 상공에 날렸다.⁹

뼈라는 대중 동원을 목표로 한 심리 전술로서 주로 심리전에서 사용하는 선전 전략이다. 심리전은 “대상 청중의 문화·심리적 성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로 정부나 정치적 운동과 같은 후원조직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과 전술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근대적 사회갈등에 기술적인 매체를 이용해 일반대중에게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스크뮤니케이션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크리스토퍼 심슨 저·정용욱 역, 2009, 27). 통치 전략적 차원에서 주요한 선전 수단인 셈이다.

미군이 뼈라를 통해서 밝힌 남한 진주의 목적은 분명했다. 이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 하달된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면, 우리는 당신들(한국인)을 돕기 위해 진주한 것이다. 우리의 명령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일본인을 반대하는 시위나 미군을 환영하는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일상 업무와 생산 활동에 집중하고 모든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증오와 흥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디서나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들의 조국과 일상생활에 발생한 절망을 끝낼 수 있다.¹⁰

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군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불복 시 처벌하겠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조선인에 의한 양갓음의 행위

9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Mission and Movement to the Objective, Korean Relations: XXIV Corps G-2, Chapter I,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0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Mission and Movement to the Objective, Korean Relations: Message No.2, Chapter I,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해방정국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제 강점 동안의 만행에 대한 조선인의 보복 행위는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고 나타났다. 또한 미군은 한반도 내 질서유지를 제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정부에서 식민지 조선의 체제를 즉시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 체제를 즉시 바꿀 경우 발생할 유혈사태와 재산상의 손실 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을 예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과거 식민지 체제는 점진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미군이 지방에 진주했을 때 지역의 질서와 상황은 동일하지 않았다. 인민위원회 활동 양상과 정치 문제, 경제 상황, 소요 문제 등이 지방마다 달랐다. 미군이 점령군임을 강조하면서 진주했더라도 통치 행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인민의 움직임에 따라 점령정책을 수정, 보완해야만 한다. 이른바 대민관리는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선 필수적인 통치 행위이다. 통치자는 안정에 위협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혹시라도 있을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 수반된다.

미군은 진주 직후에 마주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남한 정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초기 작업의 하나로 공보 수단 확보에 나섰다. 공보(Official Report)는 일반적인 정보(Information),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 홍보(Public Relation), 민간 보도(Civil Information)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본질적인 의미인 선전(Propaganda)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굳이 선전을 두고 공보라는 단어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선전이 소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선전은 공식적인 정보 전달의 의미보다는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미국식 민주주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공보를 선택한 것이다. 실상은 공보담당자도 공보와 선전의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박수현 2010, 368). 선전은 여러 매체를 이용해 특정 대상자에게 제한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적합한 통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전시와 비전시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점령국 미국에 의해서

피점령국을 대상으로 통제된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미군정에서 실시한 공보 활동은 자국의 점령목표를 밝히고 최대한 많은 한국인에게 대한정책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선 전달 수단이 필요했고 일제강점기 공보 관련 잔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점검이나 청산 과정을 생략한 채, 정책에 활용하였다(박용규 2005, 78). 미군은 1945년 9월 15일 서울중앙방송국을 비롯해 남한 전역의 11개 라디오 방송국을 접수하였다. 그런 다음 사단법인 조선방송협회와 방송국들을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미군정 3년 동안 선전매체로 운영하였다(장영민 2020, 25).

공보 관련 업무는 ‘한국공보담당부서(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와 ‘방송 및 통신부서(Communication Bureau)’가 공동으로 담당하였다. 앞의 부서는 미군 진주 이전에 파악한 여론을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진주 이후로는 부서명이 ‘정보 및 공보부서’로 변경되었다. ‘정보 및 공보부서’는 여론담당부서와 공보실로 구분되었다. ‘여론담당부서’가 여론에 관계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보실’에서는 정보 전달을 맡았다. 공보실에는 총 6개의 과가 존재했는데 ‘공공연설 및 전단지 분배과’, ‘기획과’, ‘라디오과’, ‘생산과’, ‘영상과’, ‘출판과’가 존재했다. 여론담당부서에는 ‘민간인접촉부서’, ‘연구담당부서’, ‘정치동향전담부서’가 있었다.¹¹

앞의 부서들을 통해 여론을 수집하고 정책에 유리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민간인접촉부서는 미군이 점령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컨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팀을 구성해 미군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여론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해당 조사를 거쳐 수집된 기록물은 연구담당부서가 정리하는 식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과거 식민지에서처럼 강력한 언론 통제는 없었지만,

11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I, Korean Politics and People-the First Six Months: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ection, Chapter I,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신문과 방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열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인 직원을 유입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과거 전력과 정치적 성향을 무시한 채, 오로지 편의만을 고려한 처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은 점령 직후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의 정치적 경향을 파악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일례로 ‘동맹통신 경성지사’의 후신인 ‘연합통신사’도 9월 17일부로 군정청이 접수한 다음 폐쇄 조치하였다. 그리고 19일에 우익 계열의 김동성에게 ‘연합통신사’의 관리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장영민 2020, 37).

진주 초기 군정의 통치시스템은 중앙집권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중앙 군정청의 방침이 일관되게 지방에까지 하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역 에까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단이 동원되는 수준이었다. 정보 및 공보부서에서는 전단지 300,000장을 준비해 상공에서 살포했다. 기차를 이용해서 전단을 전달하는 방식과 ‘주간 신보(Chukan Digest)’ 이름의 전국지 소식지를 제작해 도청소재지에 배부하기도 하였다. 미디어가 시골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당시 환경을 고려한 처사였다.¹²

라디오를 활용한 선전도 전개하였다. ‘당신의 군정 시간(Your Military Government Hour)’과 ‘민주주의의 교훈(Lessons in Democracy)’ 주제의 라디오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일본인 재산 처리 문제와 영어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남기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주제가 한국인의 주 관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¹³

12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I, Korean Politics and People-the First Six Months: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ection, Chapter I,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3 『HQ, USAFIK(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I, Korean Politics and People-the First Six Months: th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Section, Chapter I, 1949(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김구(金九) “한국인에 대한 인사” | 남봉순(南鳳淳) “38도선 이남의 산림 식생”
 박헌영(朴憲永) “공산당” | 이승만(李承晩) “임시정부와 김구”
 이훈구(李勳求) “농업국” | 최상희(崔相熙) “티푸스 통제”

방송 출연자는 당시 남한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인물들이 선정되었다. 주제 또한 열띤 관심을 끄는 것들로 구성하였다. 당시 산림 문제는 일제에 의한 자원 수탈로 일상에서 사용할 종이가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었다. 남봉순은 미군정 하에서 농무부 차장을 거쳐 산림 국장과 초대 농림부 차관을 역임한 인물이다(東亞日報 1947/12/26). 이훈구를 중심으로 한 농업 관련 주제의 프로그램 기획은 당시 극심했던 식량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구는 도쿄 제국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미국 캔자스에 있는 주립 농과대학에서 대학원을 수료한 인재였다(東亞日報 1946/01/07). 분야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김구, 박헌영, 이승만 등과 같은 정치계 주요 인사들도 등장시켰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감한 문제들을 주제로 구성해 호응을 얻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영화 선전을 통한 방법도 동원됐다. 미국의 건국 투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전투 성과 등의 영화가 상영됐다.

이처럼 다양한 공보 수단을 활용한 선전 활동이 전개됐지만, 그 영향이 지역으로까지 전파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는 수신기 부족과 출력 등의 문제로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 25%만이 청취가 가능한 상태였다. 장비와 보급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군정청이 전체 여론을 장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지방마다 공보과를 신설해 운영하였다(장영민 2001, 127~130).

일례로 전라남도 정보부의 주 업무로는 정당, 정치 활동, 출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다.¹⁴ 정치 정당 관련 단체 등록에서부터 회의 승인, 여론

14 당시 전라남도 정보부의 정보장교는 그랜트 미드(Grant Meade) 중위였다. 1946년 2월~5월까지 담당하다가 약 두 달간 한슨(Ed B. Hanson) 대위가 이어받았다. 다음으로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칼(Carl L. Matthews) 대위가 담당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軍政團軍政中隊 文書』 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539.

조사, 라디오 및 신문을 통한 정보 전달, 영화 및 드라마 검열과 감독, 전단 및 포스터 배포 등 선전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앙 군정청에서 하달된 정보를 어떻게 지역 전체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2001, 539). 다양한 선전 방식이 동원됐는데 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전남 지역 선전 현황(1946)

(단위: 건)

지역	포스터	주간 다이제스트	주간 농업	화보 뉴스	전단지	합계
고흥	2,200	55,810	67,000	246	138,000	139,056
곡성	1,880	37,700	42,800	216	9,000	91,596
광산	2,540	57,000	64,200	262	15,600	139,602
광양	1,980	40,500	34,800	220	11,100	88,600
광주	4,570	238,860	9,950	668	58,700	312,748
구례	1,680	36,350	33,200	206	7,700	79,136
담양	2,070	45,870	50,500	256	11,300	109,996
목포	4,430	239,330	6,050	590	61,300	311,700
보성	2,130	49,050	58,100	250	13,300	122,830
순천	2,880	108,850	72,800	320	28,000	212,850
여수	2,940	112,180	68,700	276	34,900	218,996
화순	2,040	41,370	54,600	228	15,000	113,238
합계	31,340	1,062,870	562,700	3,738	403,900	1,940,348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p.541.

〈표 2〉는 1946년도 전남 지역의 선전 현황을 나타낸다. 해당 선전은 전남 지역의 해남,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 지역을 제외한 총 열두 곳에서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에는 기존의 정보지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음이 전단이고 뉴스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당시 통신망의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단은 통신망을 갖추지 않아도 전파가 가능한 선전 방식이다. 당시 모든 설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점령지 주민에게 미국의 입장을 알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체제가 맞부딪치는 곳이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가 개최되면서 세계 패권을 노리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선전은 미국 주도의 점령방식이 우세함을 알리고 소련 점령방식의 불합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용됐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한반도에도 냉전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에 10월 항쟁의 여파로 군정 정책에 대한 당위성까지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좌익 선전에는 역선전으로 대응하면서 남한 내 권력 구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전에 더욱 열을 올렸다.

반미운동은 통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새로운 국가 수립 단계에서는 인민의 협조 여부를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였다. 국가 운영에서 통치자는 인민을 향한 포섭의 과정으로서 선의의 내러티브를 발동시키는데 이때 통치 기제로서 다양한 전략적 수법이 동원된다. 미군정 또한 전략적 수법을 활용한 통치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다. 특히 사회 질서를 해친다고 믿는 불온 언동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는 미군이 진주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 1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군정에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기존체제 유지와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해치는 자는 강력히 처벌할 것을 엄포하고 있다.¹⁵ 구체적인 지침은 점령지 치안 및 질서에 관한 명령인 ‘포고령 2호’에서 밝히고 있다.¹⁶ “본관 지휘 아래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 질서의 안전을 위하여 태평양 미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포고함. 첫째, 항복 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 미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명령·지시를 범한 자. 둘째,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 국민의 인명·소유물·보안을 해한 자. 셋째, 공중치안과 질서를 교란한 자. 넷째,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다섯째,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 회의를 거쳐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해당 사례는 통치 운영에 있어서 세부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무엇보다 치안과 질서의 목적이 점령지 주민의 안전이 아닌 점

15 미군정청.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1號)」, 서울: 국가기록원, pp.31-34.

16 미군정청.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 第1號)」, 서울: 국가기록원, pp.35-36.

령군의 보호 목적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이 남한 진주 직후에 마주한 상황은 중앙의 인공과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통치 질서였다. 지역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조직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중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유일한 통치 기구로서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미군으로서는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 중앙 집권적 통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재편은 불가피했고 통치권을 놓고 발생할 충돌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점령목적에 부합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공산주의 세력은 철저히 배척하는 식이었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양 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긴장 관계가 발생한 특이한 정치 지형이 형성된 곳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미소공위가 개시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선전 전략을 통해 자국의 점령방식이 우세함을 알리고 소련 통치 방식의 불합리성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한반도에 냉전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자, 선전 활동에도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1946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10월 사건의 여파로 군정 정책의 신뢰 문제까지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군의 선전 활동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미군정은 대한정책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선전 방식을 시도하였고 미국을 향한 불온 언동은 강력한 처벌로서 단속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좌익 선전에는 역선전으로 대응하였다.

〈1〉 ‘폭동 운운의 유언비어 악질적인 낭설에 불과, 장 부장 담(談)’ 하지 중장은 10일 공보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 발표했다. 작년에 군정청 관리 특히 경찰부 요직에 있는 관리들에게 살해 협박을 알리는 편지와 전화가 접수됐다고 한다. 군정청 조선인 관리의 생명을 살해하고자 계획한다는 것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서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그런 범인이나 미수범으로 체포된 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거쳐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중략). 유언비어를 돌려 민심을 동요하는 일은 매국적 행동이다(自由新聞 1946/08/11). 〈2〉 ‘비방 기사 금지 위반자는 처단, 이 공보부장이 언명(大邱時報 1947/05/23), ‘딘(William, F. Dean)」 장관 언명, 군정 비방 언론기관 그 존재를 허용하

지 않을 터'(獨立新聞 1947/12/27).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을 향한 저항과 순응의 저류는 다르게 나타났다. <1>은 미군정에 협조하는 조선인 관리를 대상으로 살해를 계획한다는 내용이다. 미군정을 향한 저항과 순응의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알 수 있다. 미군은 해당 사안을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관련 인물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자칫 미군정에 대한 비협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또한 유언비어를 양산하고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매국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는 군정을 향한 비방 기사를 포함해 해당 내용을 신언론기관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두겠다는 내용이다.

미군정을 향한 비방은 민생 관련 문제에서부터 정치적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소련 양 점령군에 의해서 진행된 공동위원회가 주제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38선 이북에서 실시한 소군정과 차별화된 통치의 전시효과를 드러내어 소련에 대한 체제 우월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선 미소공위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었다. 반면에 반미 입장에서 미소공위는 미군정을 공격하는데 좋은 공격 소재였다. 실제로 미소공위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증폭되고 있었다. 미군정은 즉시 단속에 돌입하였다.

<1> '대망의 미소공위 개시, 거족적인 감격도 비등, 조선 임시정부 수립 목표로 21일 신록 짙은 덕수궁서, 공위 반대 비방 기사 급지'(嶺南日報 1947/05/23), <2> '살상 교사 미소 비방자는 엄벌'(中外新報 1946/05/26), <3> '미소 비방자는 엄벌, 러취(Archer L. Lerch) 군정장관 민중에 포고'(工業新聞 1946/05/26).

미군정은 미소공위와 관련한 각종 비방 기사와 유언비어의 금지를 언론을 통해 금하고 있다. 미소공위에 대한 찬성과 협조가 곧 새로운 정부 수립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소공위를 주제로 한 유언비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유언비어는 뼈라와 포스터를 통해 퍼져나갔고 미군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반미연동 단속을 위해 우선 뼈라와 포스터에 대

한 통제에 들어갔다. 다음은 빠라와 포스터 단속 사례이다.

〈1〉 ‘가두 포스터, 빠라 취체’ 최근 시내에는 우리의 자주독립을 촉진하는 건설적인 의견을 써 붙이는 빠라와 포스터가 붙는가 하면, 인신공격과 독립 국가건설에 염려되는 내용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붙어서 도시의 미관으로나 도덕적 견지로 보아 불쾌한 것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군정청에서는 군정과 공중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계획으로 붙이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도록 할 거라고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지난 9월 9일에 발표된 태평양 방면 최고 지휘관 맥아더 대장 포고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겠다고 한다(自由新聞 1945/10/27).

〈2〉 ‘가두 빠라 첨부(貼付) 제한’ 지난 26일 오후 3시 이리경찰서에서는 시내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신전 빠라는 미관상으로 보아 일정한 장소에 게시판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하되, 만약 종전과 같이 시가지 아무 곳이나 붙이면 엄벌에 처한다고 주의를 환기하였다(自由新聞 1946/05/04). 〈3〉 ‘불온한 『빠라』 취체(取締) 법령 제72호 발동’(漢城日報 1946/05/26). 〈4〉 ‘불순한 빠라(빠라) 포스터에 단(斷), ‘민중선동’, ‘살상교사’, ‘미소 비방’하면 엄벌, 昨日 군정장관 포고로 발표’(獨立新報 1946/05/26).

〈5〉 ‘불온 빠라 엄벌, 군정장관 포고’ 군정장관 러취 소장은 25일 민중을 선동 혹은 질서 문란케 하는 빠라나 혹은 포스터를 제작 배부 또는 첨부하는 단체나 개인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포고하였다. 이러한 포스터나 빠라는 불법으로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이를 작제 또는 첨부 혹은 배부함을 발견하는 때는 즉시 체포하여 군정청 법령 제72호에 의거해 엄중 처벌할 것을 포고함. 첫째, 한 사람의 살상을 교사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 둘째, 민중을 폭동화 혹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선동적 내용을 기재한 것, 셋째, 군정을 훼방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 넷째, 미국 소련 혹은 미소의 군인이나 정치지도자를 비방한 내용을 기재한 것(釜山新聞 1946/05/27). 〈6〉 ‘불온 빠라 단속’ 서울 29일발 빠라와 선전문에 일반의 쓰고 있는 미소의 문구를 ‘쏘미’로서 전포(展布) 한다고 하여 앞서 기관단체 관계자를 구금 취조 했었는데 금후로는 미군정을 비방하는 의미의 동문구를 사용하는 자는 엄중한 죄에 처하기로 되었다 한다(嶺南日報 1947/05/01).

미군정은 군정 비방을 비롯한 ‘민중 선동’, ‘살상 교사’와 관련한 빠라를 ‘불온’ 혹은 ‘불순’한 것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하였다. 미군정의 허가를 받은 전단에 한해서는 지정 게시판을 사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세운 지역도 있었다.

해방 이후는 격동의 시기였고 정치 정당들은 앞다투어 결성되었다. 암살과 테러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여기에 신탁통치와 미소공위를 둘러싼 극한의 이념대립까지 촉발되면서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은 뼈라를 통해 시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단은 미디어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고 주요 정당과 단체들도 수많은 뼈라를 제작해 대중 선동에 발벗고 나섰다.

미군정은 허가받지 않은 뼈라는 유언비어를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군정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엄벌로서 대응하였다. 군정 통치 기간 내내 도시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제한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해방공간에서 뼈라는 유언비어가 전파하는 데 일조하였다. 정식 미디어는 아니었지만, 신문과 잡지에 버금갈 정도로 대중을 동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뼈라는 벽보, 팸플릿, 광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대중에게 전해졌다. 물론 극단적인 편향을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뼈라도 존재했다.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뼈라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다(전선태 2011, 266). 뼈라는 다양한 시국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뼈라는 군정 통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뼈라 단속은 곧 군정에 대한 비호감도를 차단하고 관리하는 행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군정에 대한 인상은 인민의 협조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다. 통치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여론담당실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인민의 군정 호감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946년 3월 여론담당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의 인기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하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서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지난 조사에서 62%이던 결과가 51%로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다.¹⁷ 뼈라와 포스터 단속을 통한 반미연동의 통제는 곧 말하는 입에 대한 통치였다. 해방 이후 혼란

17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I, CHAPTER I KOREAN POLITICS AND PEOPLE-THE FIRST SIX MONTHS, The Soldier and the Korean USAMGIK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OPO, Public Opinion Trends #4, 25 March 1945』

한 상황 속에서 유연비어는 여지없이 등장하였고 이는 군정 정책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IV. 맺음말

미군정이라는 새로운 권력이 남한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방공간에서 생겨난 제 분야의 결핍은 민중의 불만을 야기했고 이는 각종 유연비어로 표출됐다. 특히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량과 전염병 등과 같은 문제가 유연비어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미군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말하는 입에서부터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는 동시에 대민관리의 일환으로서 통치 전략을 수립해 나갔다.

해방공간은 종전의 그림자가 채 가시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조성된 곳이었다.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불안한 민심은 각종 유연비어를 쏟아냈고 식량, 주택, 생필품, 위생 등의 문제를 진원지로 발현됐다. 특히 민생 관련 사안은 통치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다. 유연비어의 방치는 곧 미군정에 대한 비호감도와도 연결되며, 군정 통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군정 통치에서 호의적인 인상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나아가 인민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다.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선전을 활용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하였다. 선전은 일련의 공보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미군정은 공보 활동을 통해서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아가 미군정을 필연적인 것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미군이 진주 직후 실시한 선전매체의 확보는 바로 이러한 점령목표에 기인한 것이었다. 선전매체는 미군정 동안에 점령통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통치시스템은 중앙집권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중앙의 방침이 지역까지 일관되게 전달되기란 쉬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디어

의 기능도 불완전한 상태에서 전단이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라디오를 통한 선전 방식도 운영됐다. 이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남기는 한편 대중에게 군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방송 주제가 한국인의 주 관심사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군정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온 언동’ 즉, 반미언동에 대한 통제에 각별히 힘을 쏟았다. 각종 유언비어를 ‘불온’ 혹은 ‘불순’한 것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였다. 유언비어는 대부분 미군정을 향한 불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당시 유언비어는 사회 상황과 민중 의식을 대변하였고 ‘빠라’나 ‘포스터’를 통해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단속도 가두 미관을 이유로 철저히 통제되었다.

미 군정기 유언비어 단속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데 바로 한국인에게 통제된 정보를 전달하고 남한 정책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민생 관련 주제를 여론으로 대상화한 이유는 바로 남한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점령통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였다. 당시 민중 의식은 반미언동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군정의 대민관리 방식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신문〉

『工業新聞』, 『京鄉新聞』, 『南朝鮮民報』, 『獨立新聞』, 『獨立新報』, 『大邱時報』
『東亞日報』, 『釜山新聞』, 『서울신문』, 『嶺南日報』, 『自由新聞』, 『中外新報』, 『漢城日報』

〈영어〉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2,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 『주한미군사』 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1.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5,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G-2 Periodic Report, HQ 6th Infantry Division, Chonju, Korea』

〈일본어〉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 第一巻 日本統治の終焉』, 東京: 巖南堂書店.

2. 단행본 및 논문

장영민. 2020. 『한국 방송의 성장과 미국의 대한선전』. 서울: 선인.
주나미 역·알랭코르뱅 저. 2020. 『악취와 향기』. 서울: 오롯.
크리스토퍼 심슨 저·정용욱 역. 2009. 『강압의 과학 -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1960』. 서울: 선인.
김복수. 1991. 『美軍政의 言論政策과 韓國言論의 形成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현. 2021. 『점령기 미군정의 공보활동과 선전담론: 미군정 발행 주간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민환. 1991.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김보미. 2014. “미군정기 정치적 의사소통 구조와 여론조사.” 〈사회와 역사〉 103.
박수현. 2010. “미(美) 군정(軍政) 공보기구(公報機構) 조직의 변천(1945.8-1948.5).” 〈韓國史論〉 56.
박용규. 2005. “미군정기 방송의 구조와 역할.”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 사회 동향(1945-1947).” 〈韓國史論〉 60.
전선태. 2011. “전단지외의 수사학 -해방 공간의 ‘빠라’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35.
차재영. 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5.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Management by the Control of Anti-American Speeches and Behavior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Song, Jeonghyun

After liberation, the U.S. military stationed in South Korea intended to create favorable public opinions by employing propaganda strategies. A series of promotion activities was clearly to create all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friendly Korean govern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messages formed from mouth to mouth have demonstrated a great power. The deficiency of all domains that occurred in the liberalized space was represented as anti-American speeches and behaviors with various canards. The U.S. military not only promoted the U.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rationale of their occupying rule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but also controlled 'rebellious activities', that is, anti-American speeches and behaviors, which occurred in Korean society.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the canards in examining the situation and public consciousness of society at the time since most canards typically stemmed from social problems. The 'leaflets' and 'posters' functioned as major tools in spreading canards. The crackdown on canards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a certain goal, which was to deliver controlled information to Koreans, and furthermore, also included the purpose of utilizing it to advantage in favor of their policies toward South Korea. This study focused on canards, represented by anti-American activities, among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transplanting a new power called the U.S. military government to South Korea. Although canards are sometimes utilized by those who belong to the power class and cannot be said to be perfect as media, the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y reflect the feelings of the public at the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not only controlled the mouths for speech, thoughts, and behaviors under the name of keeping social order but also established governing strategies as part of civil management.

Keywords -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ti-American Speeches and Behaviors,
Canard, Leaflet, Civil Management

(투고일: 2023년 11월 21일, 심사일: 2023년 12월 0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